

13차시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학습목표>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 고소절차 및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불복방법과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요건 및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와 고소권자 및 고소기간, 고소의 취소 및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불복방법인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례>

사건의 개요

R도에 소재한 S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A는 2학년에 올라와 같은 반이 된 B, C, D, E, F 등으로부터 돈을 빼앗기고 집단 따돌림을 당해왔다. 그러던 중 2학기 개학을 하자마자 2011. 9. 1. 점심시간 때 교실에서 B는 C, D, E, F 등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A의 뺨을 손바닥으로 4~5회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A가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B는 A가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있으라고 하였다. 수업시간이 끝난 후 A는 B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B 몰래 교실을 빠져나와 집으로 가려고 복도까지 나갔는데, C가 A를 뒤따라가 A의 다리를 3회 정도 걷어차면서 A를 다시 교실로 끌고갔다. 복도에서 같은 반 친구 Y 등 10 여명이 쳐다보자, C는 Y 등 10여명에게 “A가 내 지갑을 훔쳐 간 도둑놈이기 때문에 지갑을 찾기 위해서 교실로 데리고 간다.” 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C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A가 C의 지갑을 훔친 적도 없었다.

B는 C에게 잘했다고 하면서 평소 A를 괴롭혀 온 C, D, E, F에게 A를 화장실로 끌고 오라고 하여 C, D, E, F는 B의 말에 따라 A를 화장실로 끌고 갔고 이때 F는 A의 가슴을 팔꿈치로 2~3회 가격하면서 끌고 갔다. 화장실에서 B는 D에게 A와 복싱을 해보라고 하였다. A가 D와 복싱을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C, D, E, F는 화장실 출입구를 막고 A가 화장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C는 A의 얼굴과 배 등을 복싱하는 것처럼 하면서 마구 때려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했다. 한편 위와 같이 A가 전치8주의 상해를 입고 집으로 가려고 운동장을 걸어가는데 Y등 5명이 A에게 다가와 팬찮냐고 묻자, E는 A에게 “개새끼야. 아픈척하지 말고 꺼져.”라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F는 A의 급식에 침을뱉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고 뒤에서 쿡쿡찌르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였다.

A 및 A의 보호자는 S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고, 2일 후 B, C, D, E, F를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경찰·검찰 수사결과, 검사는 B와 D를 상해죄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면서 B는 구속되었으나, D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한편 C, E, F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 및 A의 보호자는 C, E, F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요청하였다.

C, E, F에 대한 재수사 결과 Y등 목격자의 진술이 확보되어 C, E, F에 대해서도 기소가 되었다. 한편 C와 E의 보호자는 C와 E에 대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지자 A와 합의를 하였고, A는 C와 E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고소가 취소되자 C의 보호자는 A와 합의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 및 A의 보호자는 C를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B와 D에 대해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나?

사건의 쟁점

형사사건에서 친고죄와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고소와 고소의 취하에서 어떻게 그 효과가 달라지는 지가 문제되며,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가능한지, 고소를 취소했을 경우 검찰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 및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해 하는 지가 문제되며, 배생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는 어떤 범죄가 있는지 및 배상명령 신청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사건의 결말

A 및 A의 보호자는 C, E, F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검찰항고

나 재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C의 A에 대한 명예훼손(“A가 내 지갑을 훔쳐 간 도둑놈이기 때문에 지갑을 찾기 위해서 교실로 데리고 간다.”고 이야기 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공소제기전) 또는 공소기각(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 취소가 있는 경우)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C의 보호자가 A와 합의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C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경우라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B 및 D는 A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위에 해당하므로, A 및 A의 보호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B와 D에 대해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8조에는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고소의 취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서

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라고 할 수 없다.

고소 또는 고소권의 포기란 친고죄의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할 때에는 고소권자는 고소권을 상실하게 된다.

1. 형사사건과 고소 - 동영상 강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고소권자는 (1)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지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4)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단,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2. 고소의 취소와 포기 - 동영상 강의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

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방법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 후의 고소취소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면과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검사의 진술조서 작성시에 고소취소의 진술이 있었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의 취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라고 할 수 없다. 고소의 취소에 대해서도 대리가 허용된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를 취소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고소 또는 고소권의 포기란 친고죄의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할 때에는 고소권자는 고소권을 상실하게 된다.

3.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예외 :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및 즉결심판).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불구속사건의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공소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구속된 경우 구속수사기간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며, 경사 및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인으로 지칭되는 자를 피의자라고 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즉, 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30일 내의 기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5. 공소제기 후 구속기간

공소제기 후에는 2개월간 구속된 채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도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로 하기 때문에, 공판절차의 기간은 최장 1심에서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다만, 상소심(2심과 3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2심과 3심에서의 구금기간을 3차 갱신하는 경우 각 6개월간 구금될 수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 3심까지는 최장 18개월간 구금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의 지정에 대하여 정한 대법원의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는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에 대하여,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기소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 사건(1건 수인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인 사건도 포함한다)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없이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기일을 지정하는 날로부터 14일(1건 수인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인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되, 재판요일 등 담당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선고기일의 지정에 대하여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 있고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및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사안이 간단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등 기타 간이한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기일은 사안의 복잡, 피고인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이 재판부에 배부되자마자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며, 제1회 공판기일은 14일~17일 사이로 정해지고,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의 경우 7일 이내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구속사건의 경우 2주~3주 사이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며,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3주~4주만에 1심 재판이 종료될 수 있다

6. 불기소처분

검사의 사건처리에는 공소제기·불기소처분 및 타관송치가 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및 기소중지가 있다. 혐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이 있다. "혐의 없음"이란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인데,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죄가 안 됨"이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법률상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때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각하"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죄가 안 됨·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 또는 고발한 경우,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한 경우,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를 제외한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하의 결정을 한다.

"기소유예"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소중지"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이므로 수사의 종결이라기보다는 수사중지처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고소인, 고발인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때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때에도 혐의의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불복수단으로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 재정신청이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며, 고등검찰청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항고를 한 자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로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하므로, 재항고는 고발인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항고는 고소인 등이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는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를 한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기각하지 않는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도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마쳐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이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함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8.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상해 · 존속상해의 죄(형법 제257조제1항), 중상해 · 존속중상해의 죄(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해치사의 죄(형법 제259조제1항), 폭행치사상의 죄〔형법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6조까지 단, 제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는 제외, 절도와 강도의 죄(형법제329조부터 제346조까지), 사기와 공갈의 죄(형법 제347조부터 제354조까지), 횡령과 배임의 죄(형법 제355조부터 제361조까지), 손괴의 죄(형법 제366조부터 제372조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정리하기

"기소유예"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불복수단으로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 재정신청이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를 한 자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로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하므로, 재항고는 고발인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항고는 고소인 등이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는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